박연차 후폭풍…4월 국회도 차질

한, 추경 처리·경제입법 추진 표명 불구

여야 입장차로 의사일정 논의 지지부진

4월이 채 1주일도 남지않았지만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대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는 등 개회에 난기류가 흐르고 있다.

더욱이 여야간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대한 이견이 커 협상 자체도 난항이 예상된다.

일단 한나라당은 최대현안인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4월 임시국회를 속도감 있게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25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이번 임시국회는 서민 추경과 경제살리기 국회가 되도록 하겠다"며 "추경안과 경제법안 심의에 진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이번 임시국회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은 생략하고, 대정부질문도 긴급현안질의 형태로 이틀만 질의를 하는 것으로 대체하자는 방침을 밝혔다.

국회법상 본회의가 열리는 기간엔 상임위가 개최될 수 없는 만큼 대정부질문을 축소해 추경안 심의를 서두르겠다는 것.

하지만,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사일정은 다 정해져 있는 대로 하면 된다"며 "한나라당이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국회는 정상적인 국회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예전 임시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 일정을 갖고, 대정부질문도 경제분야와 정치분야, 통일외교안보분야 등 정상적으로 진행하자는 것.

이와 함께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 데 대한 시정연설도 청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상반된 입장에 있는 만큼 의사일정에 대한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아직까진 대화 테이블 자체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주호영 원내수석부대표가 출장 때문에 지금껏 국내를 비웠고, 서 수석부대표는 '박연차 리스트'와 관련해 검찰 조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당분간 여야 원내지도부의 협상개시가 쉬어보이지는 않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4월 임시국회의 조기 개최는 고사하고 국회법에 규정된 대로 오는 4월1일 개최할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의견이 제기될 정도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정권 원내대변인은 "임시국회 개회 시점이 4월1일을 넘기진 않을 것"이라며 "이제부터 야당과 대화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주택침수 막아라" 24일(현지시간) 미국 미네소타 무어헤드에 있는 한 주택이 홍수 위험에 처하자 주민들이 집 주변에 모래주머니를 쌓고 있다. 이 집은 1902년에 지어졌다. /연합뉴스

"北, 억류 여기자 신변안전 보증"

美 국무부 부대변인 밝혀

북한은 자신들이 억류중인 미국 국적 여기자 2명의 신변안전을 보증한다는 입장을 미국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버트 우드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24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측이 미국 국적의 한국계 유나 리와 중국계 로라 링 기자들을 잘 대우하겠다고 보증했다고 밝혔다.

우드 부대변인은 또 "우리는 스웨덴 정부가 이들 두 여기자에 대한 영사적 접근권을 북한주재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 제공받아야 한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북한과 정식 외교관계가 없는 미국은 평양에 있는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북한에 전달해 오고 있다.

그는 북한이 이들 기자를 억류한 뒤 간첩 혐의로 신문하고 있다는 일부 한국 언론보도와 관련, "그 같은 혐의를 확실히 알고 있다"고 밝혔으나, 혐의사실이 실제로 적용됐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하지만 그는 이번 사태가 "극도로 민감한 문제"라면서 "우리는 이번 사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관련 언급을 적게 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는 더 낫다는 판단"이라고 밝혀 물밑 외교를 통한 사태수습에 나서겠다는 종전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또 북·미간에 뉴욕채널을 통한 직접 접촉이 있었는지, 북한이 이들 여기자 들의 신변안전을 어떤 경로를 통해 보증했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도 "더 이상 말은 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유보했다.

앞서 북한은 두만강 인근에서 취재하던 이들 두 기자에 대한 억류 사실을 지난주 말 공식 확인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조사중에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밝힌 상태다. /연합뉴스

美 상원 '신문지원법' 발의

미국에서 광고수입 급감으로 신문사들의 파산보호신청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상원의원이 신문산업 지원법안을 발의하고 나섰다.

벤저민 카딘 의원은 24일(현지시간) 신문사에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 교육 등 공공 목적의 비영리 법인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내용의 '신문 회생법' 제정안을 상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처리되면 해당 신문사는 공영 방송사와 비슷한 지위를 갖게 된다.

이를 위해 법안은 광고 및 구독료 수익을 비롯, 기사 취재와 회사 운영을 위한 협찬금에 대해 미국 세법에 따라 면세 혜택을 받도록 했다. /연합뉴스

"北 돌발행동은 정권생존·협상력 강화 차원"

샤프 한미연합사령관 밝혀

윌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은 24일 북한의 최근 도발적 행동에 대해 "정권생존을 확보하고 국제사회에서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샤프 사령관은 이날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이 같은 분석을 내놓고 "북한은 동북아 안정과 안보에 주요한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샤프 사령관은 "정권 생존이 북한의 최우선 관심이 되고 있다"면서 "북한은 탄도미사일 및 관련 기술의 주요 공급국을 유지하고 있고, 재래식 무기의 주요 확산국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우리는 북한의 대규모 재래식 군사력과 대포, 탄도미사일 및 휴전선과 매우 인접한 곳에 모두 배치된 특수부대들에 의한 위협을 계속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가장 우려스러운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북한 정권의 김정일과 선군정책을 하려는 절대적인 욕망"이라면서 "주민들은 돌보지 않고 북한 정권의 생존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려는 그(김정일)의 의지"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日, 내일 北 로켓 파괴명령 내릴 듯

일본 정부가 북한의 로켓 발사 예고와 관련, 오는 27일 안전보장회의를 열고 자위대법에 의한 '탄도미사일 파괴조치 명령'을 내리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5일 전했다.

앞서 가와무라 다케오 관방장관과 나카소네 히로후미 외상,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은 25일 회동을 갖고 이 명령 발령과 관련한 절차에 대해 최종 협의를 벌였다.

파괴명령에는 일본에 날아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 각료회의의 결정을 거쳐 방위상이 명령하는 방안과, 일본에 날아올 우려가 없지만 사태 급변 가능성에 대비해 사전에 방위상의 판단으로 비공개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방안이 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사전 통고대로 로켓이 발사될 경우엔 일본 동북 지역 상공을 통과할 뿐 일본 영토나 영해에 낙하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방위상이 비공개로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